

민주, 北무인기 도발 尹대응 비판...“안방 여포”

“尹, 심각성 인식 못해...대오각성” 정청래 “진돗개 발령 않고 개 사진” 당일 NSC 미개최, 만찬 행사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부대 언급, 국가안보보좌회의(NSC) 미개최 등을 지적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28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까지 비행하다가 되돌아간 것 같다”며 “정말 안방 여포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며 “안보 태세 부실, 기만하지 못하고 무능하단 점을 보여줬다. 대오각

성 하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 발언을 지적하고 “병사들 대신 적진을 정찰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전투단은 이미 창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가 무슨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창설된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긴다니”라며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있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비상 상황이면 NSC를 열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NG만 연발한다”며 “진돗개도 발령 않고 웬 개 사진만 방출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저은 초유의 사태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일성은 전 정권 탓”이라며 “집착 정도가 스톱킹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국군은 드론 부대를 창설했고, 방위사업청은 안티 드론 사업을 진행했다”며 “조소형 드론 잡는 무기 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고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전력과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뜬금없이 이미 존재하는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하니”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에선 왜 NSC를 개최 안 했냐는 질문에 전황 중에 토론하란 말이냐며 억박질했다”며 “하늘이 뚫렸으면 최소한 걸손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최근 군사 긴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했다고 말한다. 국민 생명을 불모로 합부로 그런 말을 내뱉어도 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남 탓할 시간에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대통령은 전시 각오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조유의 상황에 대통령은 NSC를 소집하지 않고 저녁에 한가하게 관저 만찬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생명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군 통수권자란 자각이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보”라며 “책임질 생각이 없는 데 왜 정권을 잡았나”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 해상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 추진 지역 대학·발전사·제조기업과 협약

전남도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발맞춰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과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28일 맞춤형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학·관 공동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기관은 전남도를 포함해 지역 대학(목포대·한국에너지공대·목포해양대·동신대·순천대·초당대·전남도립대·목포과학대·한국폴리텍 전남캠퍼스), 발전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 협의체·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터 파트너스), 제조기업(두산에너빌리티·현대스틸산업), 유관기관(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으로 총 15개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융합전공 개설·운영 등 분야별 특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체제를 운영한다. 또 인력 수요 정보제공과 지역인재 채용,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2월부터 도내 지역대학을 직접 방문해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학별 특성화 방안 등을 구상했다.

이를 통해 4월부터 대학 교수진들로 이뤄진 실무협체제를 구성해 대학별 인력양성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5월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과제에 전문인력 양성이 반영되면서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을 활용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 민주, 무더기 반대표 던진 듯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표는 101명이 던졌다. 체포 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12월14일 제출, 12월15일 접수 후 12월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그간 노 의원은 신상 발언, 친전 전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부결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이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노 의원 신병 처리 여부는 법원 판단에 놓이게 됐다.

이는 21대 국회 체포 동의안 첫 부결 사례이다. 기존 가결 사례는 2020년 10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진 전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3건이 있다.

김경수, 봉하마을서 “국민 통합 강조 이제야 알 것 같다”

28일 특별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현화 분향한 뒤 묵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 서 부인 김정순 씨와 큰 절을 올렸다.

김경수 전 지사는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는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고 남겼다.

또 ‘남아 있는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늘 나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세해도 되고 했으니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야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묘역 주변에 나온 지지자들은 ‘김경수가 돌아온 오늘이 따스한 봄날입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석방을 환영했다.

김 전 지사는 특별사면을 받은 28일 0시 경남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인생탐방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인생탐방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광주서 “민주주의 퇴행...다시 싸워야 할 때”

“이재명 죽인다고 무능 안 가려져...함께 싸워야”

광주 송정매일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주의가 숨쉬기 점점 어려워지는 퇴행의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도 검찰 수사에 맞서 ‘이재명을 지켜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검찰 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지금 검찰이 하나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정매일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난 뒤 “여러분 왜 이재명을 지키자고 말씀하나.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이 죽으면 끝인가.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편은 있는 죄도 없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 탈탈 탈다가 먼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게 국민이 말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인가”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이 나라와 민주주의, 우리 이웃과 가족을 지키자”며 ‘독재 정권’과 ‘야당 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경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근처로 날아와 온갖 침보 활동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정부가) 하려고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불인해서 살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몇몇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게 그들의 신념이 아닌가”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의원들도 검찰의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저는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용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마시라고 (이 대표에게) 권고드렸다”며 “그러나 이 대표가 내가 뭐 쟁길지도 않고 이미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데, 당당하게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무인기 1대가 우리 영공으로 넘어온 직후 첫번째 지시로 격추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으나,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격추 실패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대민 피해가 우려되고 북한 무인기 규모가 우리 대공 시스템에 잡히지 않은 작은 규모로 인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격추 실패 자체보다 군의 태세에 대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께

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에 대한 기대를 충족 못시킨 데 대해 강하게 질책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군의 기강 해이와 훈련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셨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번째 무인기 1개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은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2대 혹은 3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국가안보실이 NSC를 개최하지 않은 등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스시스

광주 자치구의회 사무국 공직자 인사 교류 협약 의회 인사권 독립 1년만...체계·자율적 인사 운영 기반 마련

광주 5개 자치구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1년 만에 상호 인사 교류 협약을 맺는다.

광주자치구의회협의회는 28일 원활한 의회사무국 소속 공직자 인사와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5개 구의회간 인사 교류 협약을 맺는다.

협약서에는 광주 5개 자치구의회(동·서·남·북·광산구의회) 간 소속 직원 인사교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교류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실무협의·조정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한 공동 협력 ▲신규 채용·교육훈련 관련 사항 ▲인사·교육분야 등 공동협력 등이다.

이날 오후 열린 협약식에는 5개 자치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협약을 맺고 협력사항을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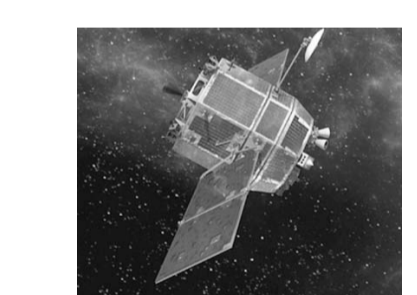
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올해 1월부터 구청 집행부와 별개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의회사무국 인력 규모 상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각 의회마다 인력 규모가 20명 안팎인 탓에 자체 승진·정보인사에 한계가 많았다.

특히 의회사무국을 이끄는 4급의 경우, 의회 내 5급 승진 대상자가 없거나 구청 4급 인사와 맞물리는 관계에 따르면 집행부로부터의 인사권 독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직제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기적인 순환 인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5개 구 의회 의장들은 각 의회간 인사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수 차례 협의, 인사 교류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김도기 기자

韓 달 궤도선 다누리, 임무궤도 진입 성공 “2시간마다 달 공전 중”...달상공 100km 안착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이 최종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11시 6분 마지막(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앞서 다누리는 지난 17일 새벽 2시 45분께 첫번째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바 있다. 추력기를 사용해 시속 8000km에 달하는 속도를 시속 7500km 수준으로 줄여 달 중력에 무사히 포착됐던 것. 이후 지난 21일 2차 진입기동, 26일 마지막 3차 진입기동까지 마치면서 무사히 임무궤도에 안착하게 됐다.

당초 항우연은 다누리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진입기동을 통해 다누리의 비행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확보되면서 남은 4회 기동(2.3.4.5차)을 2회(2.4차)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호매민평
이태헌

굴욕

신제타격

무인기

무산
우리도
덕으로
드론날려

무인기
이미주어
드론
무기무능무법
윤석열퇴진

무산이길요한다
개하고노내

태헌

尹, 무인기 격추 실패 등 軍에 “훈련 대단히 부족” 질타

北무인기 침공 직후 ‘격추’ 포함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당시 격추 명령을 내렸음에도 우리 군이 격추에 실패하자 격노한 것으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27일 지휘방커회의 도중 윤 대통령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안보실장이(합참대응에 대한) 담당함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우리 군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26일부터 수시로 합참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인기 1대가 우리 영공으로 넘어온 직후 첫번째 지시로 격추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으나,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격추 실패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대민 피해가 우려되고 북한 무인기 규모가 우리 대공 시스템에 잡히지 않은 작은 규모로 인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격추 실패 자체보다 군의 태세에 대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께

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에 대한 기대를 충족 못시킨 데 대해 강하게 질책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군의 기강 해이와 훈련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셨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번째 무인기 1개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은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2대 혹은 3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국가안보실이 NSC를 개최하지 않은 등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스시스